

박대통령-새누리 신임지도부 청와대 오찬 회동

“당·정·청은 하나”…웃음 만발 1시간50분

김영란법 규제 완화 공감대
이정현, 박대통령 25분 독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간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찬에서는 ‘당·정·청 신(新)밀월관계’를 예고하듯 새로운 각오가 나왔고 덕담 속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정현 대표에 대해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각별한 친근감을 표시했다.

오찬에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이, 새누리당에서 이 대표,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유창수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오찬 회동은 오후 1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분이 더 지난 1시5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박 대통령은 분홍색 재킷 차림으로 오찬장에 들어와 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하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특히 유 최고위원에게는 “새로운 청년 스타가 되겠다”며 덕담을 건넸다.

첫 대화 주제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픽이었다. 박 대통령은 “박상영 선수가 펜싱에서 13대 9라는 상당히 밀려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되뇌며 용기를 갖고 도전해 금메달을 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가 1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가장 강조된 화두는 ‘당·정·청 일체’였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당의 새 지도부에 국민이 바라는 바는 반복하지 말고 민생정치에 모든 것을 바쳐서 해나가 달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당부터 화합하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삶도 지금보다 편안해질 수 있고,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을 구분한 것은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저희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저희 여당은 우리 대통령이 이끄시는 이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 정말 책임감 있게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책무를 꼭 할 것을 다짐한다”고 호응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의 경우 규제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

핑을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하는 면이 시행령에 있다’고 답했다”면서 “그러면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당 대표 간 정례 회동에 대해서는 “정례회동 갖고는 양이 안찬다”면서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할 것이고, 꼭 만나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오찬 회동 뒤 박 대통령과 이 대표는 별도로 25분간 독대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당론 1호 법안 ‘5·18 특별법’

정책의총서 최종 결정…8월 임시국회서 역점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총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의 애곡을 처벌하고 ‘임을위한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토론을 거쳐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36개 법안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8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매월 초 정책의총을 개최해 역점 처리 법안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역점 처리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범민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고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위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추려 정책의총에 올렸다.

한편, 이날 마지막 정책의총에서 김종민 비상대책위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와 관련, “정당이란 집권 의지가 없고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강경파에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어 “의원들 중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적인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집권이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추경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합의의 물꼬를 틀 것인지 주목된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산해보면 8월 19일이 추경의 국회 통과 마지막 선”이라며 “정치적인 조건을 걸지 말고 그야말로 민생을 위한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야권 압박에 나섰다.

추경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로 제출됐지만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8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추경안 심사가 막혀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주 소속 초선 19명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일자리·민생 사업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추경안 검토 결과 본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이) 대기업과 부실 정책자금에 지원하는데 쓰는 꼴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전주서 호남 예산 보파리 푸나

23일 예산정책협의회…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 참석할 듯

새누리당이 불모지인 호남지역 광역단체와 23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호남 출신 이정현(순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소외됐던 호남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좋은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는 23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초 협의회에는 이 의원과 김광림 정책위 의장, 주광덕 예결위 간사, 정운천 예결위 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일부만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면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엔 열릴 호남권 자치단체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당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로 의미가 격상돼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기반 조성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조성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산업부) 등 20건의 국비 사업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경유 노선 조기 확정 ▲남해안철도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단선 전철 건설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립 등 18개 사업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추경 12개 사업, 6건의 정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협의회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짓는 20일 이후에 열려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출신 중용 땀 미래부·농식품부 장관 발탁 가능성

이정현 대표 건의에

박대통령 “참고 잘 하겠다”

이달 중순께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온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에서 ‘탕평’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호남 출신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건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으로 부터 비롯된 분석이어서 호남 출신인사들의 중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1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간 청와대 오찬에서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 다 판단할 문제이지만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참고를 잘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실 이번 개각은 실무 인사검증을 모두 마치고 사실상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개각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의 이번 건의는 당·청 간의 일정한 교감을 거쳐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탕평인사의 최우선 방향은 ‘호남 중용

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 대표가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두 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아가 최초의 호남 출신 보수정당 대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남 출신의 고위 관료나 유력 정치인을 내각에 전격 발탁해 탕평인사를 실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6개 부처의 장관 중에 호남 출신이 등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 내각에서는 김현웅(고흥) 법무 장관과 이기권(함평)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 출신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군 가운데 완도 출신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거론된다. 특히 정 전 처장은 지난 총선 때 여당의 사지인 광주에서 출마하는 결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미래부 장관 후보군 가운데 윤종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KT 성장사업부장과 미래부 2차관 등을 역임한 창조경제 전문가여서 주목된다.

탕평의 방향이 지역을 넘어 당내 계파 안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의 중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재를 두루 중용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개각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달 중순 내로 예상되는 개각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